
수입자유화와 농업정책의 방향

〈제 2 주제〉

수입자유화와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검토

김 동 희 博士
(단국대 교수)

자유무역론의 허와 실

각국이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국제분업을 수행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효율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그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게 될 것이다.

이를 실천에 옮기려면 첫째 국제시장이 정부에 의하여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하며, 둘째 모든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또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에 모든 상품의 가격은 그 한계비용과 같아지고 각 요소에 대한 수익성은 모든 용도에 있어서 균등해질 것이 가정된다.

공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완전고용이 실현되면 농업도 개방해야 보다 성숙된 산업사회, 복지국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경쟁시장보다 불완전경쟁시장이 지배적이며, 기술변화 자원 및 제도(또는 체제)의 규제를 매우 크게 받고 있음을 본다.

특히 농업에 관하여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는 농업이 수요와 공급면에서 비탄력적이라는 이유 외에 국민식량을 공급하며 국토와 생물적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산업으로서 경제시장에는 반영되지 않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농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일정수준의 보호가 요구되어진다.

농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낮아지지만 절대적으로는 고급화되고 증가해 가는 농업적 상품과 서비스(환경보전)에 대한 수요때문에 계속 전진한 산업으로 성장되어야 한다. 만약 현재의 국제시세가 싸다는 이유로 농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한다면 그 품목은 물론 관련산업에까지 심한 충격을 받을 것은 뻔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문제인식부터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절

각국의 잔존수입품목

나라별	품목수	공산품	농산품	공 산 품 내 역
캐 나 다	5	1	4	낙농품 등
베미룩스	5	3	2	
덴마크	5	0	5	
프 랑 스	46	27	19	말, 양, 벌꿀, 감자, 도마도, 포도 등
서 독	4	1	3	감자
이탈리아	8	5	3	
아일랜드	10	3	7	
영 국	3	2	1	바나나
일 본	27	5	22	낙농품, 쇠고기, 쌀가루, 밀가루, 오렌지, 과즙 등
노르웨이	49	1	48	
스 웨 덴	6	1	5	
미 국	7	6	1	waiver품목으로 낙농품 명목 등 13개가 있음.

대적으로 완전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농업도 산업으로서 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도태할 것은 도태시키고 이윤추구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제부터는 농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민경제에 대하여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힘을 결집할 때라고 본다.

김정태 (한국일보논설위원) : 농산물중 쌀의 경우를 보면, 태국, 월남, 인도네시아 등이 쌀수출국이었으나 이제는 수입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세계 여러 선진국들이 무역자유화를 위해 개방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을 규제하고 2중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60년대 미국 닭고기를 막기 위한 불란서의 닭고기전쟁, 독일은 감자, 불란서는 이태리로 부터의 포도주방어, 호주의 쇠고기판매를 위한 beef war, 미국과 일본간의 오렌지전쟁, 중공의 생사, 태국의 타피오카, 필리핀의 바나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개방경제를 표방들은 하나 국가이익과 상충되어 실제적으로는 수입들을 제한하고 있다. 명

분과 현실적 요구로 대외용과 대내용의 2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남들은 다 뺏과 같이 두개의 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외국의 압력에 수입을 개방하자는 얘기를 하지만 대내용은 이들 외국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수입에 따라 이해절실한 자가 이익을 대변하여 사회여론화하고, 여론이 정치적 압력이 되고, 정부는 압력을 배경으로 대외협상에 임해서 실위를 얻는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방법으로 10~15년을 버티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이해절실한 자는 가만히 있고 들떠 있는 교수나 연구원들이 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압력이 될수 없다.

이해 계층의 의사가 결집되어 이것이 정치채널과 연결되어야 한다.

오호성 (성균과대교수) : 농산물 보호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쇠고기수입을 소수입으로 정책을 바꿀 경우 농민소득 증대와 쇠고기 자급율이 향상되지만, 외화절약이 서로 상충될 경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